



김 명 주 국회의원

2006년 어항지 여름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김명주 국회의원을 만나본다.
우리나라 대표적 수산도시인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하여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의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개
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키는 등 수산업과
관련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어촌·어항법」의 명확화와
홍보강화를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 편집자 주 -

-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2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느낌입니다.

특히, 최근 5.31 지방선거로 더욱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심각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고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고 있으며, 어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써 해양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7대 국회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새로운 마음으로 수산업의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어민들의 고충을 재점검해 나가려고 합니다.

- 수산관련 주요 의정활동은?

돌이켜보면,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수산업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정 감사를 비롯하여 입법·정책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차례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어류양식수협이 구조조정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고, EEZ상의 모래채취에 있어 해수부의 역할 증대와 점·사용료의 수산업발전기금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등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수협의 외국인 수산물 수입·유통 실태와 어업인을 올리는 수협의 무책임한 행태를 개선토록 하였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않은 바다양식업자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해수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입법 활동으로는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여야 국회의원 재석 24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굴양식 및 굴가공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선박안전법개정”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올리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난구조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인정성 제고를 위하여 「어촌·어항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특히, 농림특례규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소규모 양식 어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 활동으로는 굴양식 업계와 굴양식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인 굴 패각 처리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굴 패각의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농림부, 환경부 등 3개의 관련 부처 실무자와 함께 일본 현지 방문 및 부처간의 정책협의회를 개최 하는 등 굴 패각 문제를 연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올리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고성 맥전포항에 국비 150억원, 통영 학림에 국비 60억원이 지원되는 어촌관광모델 사업을 유치하였고, 국비 55억원이 지원되는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건립사업과 국비 7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수산물유통 및 회센터 건립 등 지역 어민들의 당면 현안에 대하여 열정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온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유는?

현행 「어촌·어항법」은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자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의 실시근거 등이 입법사항이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의 개발에 따른 어촌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규

정이 없어 형식적인 지도감독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 실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시책 수립 및 시행,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과거 수출효자산업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던 수산업이 지난 2001년 3억 7,000여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적자폭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총액은 23억 8,400만 달러, 수출은 11억 9,300만 달러로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1억 9,100만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대내적으로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어자원 고갈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 WTO/DDA와 FTA 체결 추진에 따른 수입수산물의 증가 및 수산보조금 규제에 따라 정부지원 감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EEZ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경우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수산업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위기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듯이 이러한 위기를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위기의 한국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통한 수산자원회복과 수산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과 어촌관광산업 육성 등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삼아 어촌지역의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연근해 자원량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함은 물론 늘어난 자원을 바탕으로 '수산식품=웰빙' 이

라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품목별 공동 브랜드 개발과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수출상품의 개발 등 수산식품 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촌을 단순한 수산물 생산 지역이 아니라 관광 어촌으로서 어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어촌기반시설 확충 및 복합 생활공간 조성 등 다기능 종합어항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WTO/FTA 협상을 잘 이끌어 내기 위해 협상단계별, 시나리오별, 주요 분야 및 어종별 경쟁력 실태를 철저히 분석한 후 대응하고 협상결과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어민의 입장에서 서서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가 한층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발전을 위한 조언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의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그동안 어촌어항 개발 관련 조사·연구 도서 발간 활동과 어촌 어항 종합개발 사업 참여,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항내 유지 준설 등 어항 관리 업무, 어촌·어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어촌어항 문화의 창달 사업, 어촌 관광 활성화 사업, 외국과의 기술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7척의 어항청소선과 1척의 다기능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의 운영을 위임받아 우리나라 어항, 어장의 해양 및 수중침적 폐기물의 수거 등 해양 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최근 해양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선진 수산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하여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은 물론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협회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 수산계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에 수산업 환경이 대내적으로는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어자원의 고갈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WTO/DDA와 FTA 체결 추진으로 수입수산물도 증가하고 EEZ제도의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 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는 등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어 우리 어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어민들과 수산업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수산업의 발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초심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근해어장의 자원관리 강화와 해외 신어장 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어촌을 살기 좋은 어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어촌과 어항을 생산·주거·관광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및 가공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수산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어려운 수산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21C 선진해양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하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현장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고 발전의 동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여 세계무역거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수산업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약력 및 경력 사항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 법학과 졸
-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판사
- 제7대 경남도의원(경남 통영)
- 제17대 국회의원 (경남 통영,고성)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전)
-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 (05.12.19 ~)
- 한나라당 혁신위원회 위원
-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책임연구위원
- 국회 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 운영위원
- 한일의원연맹 21세기 분과위원회 간사
- 국회 양성평등포럼 회원
- 한나라당 농어촌 의정회 회원
- 국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